

# 이재명 민생 정주행...비명계 불만 고조

### 이재명, 사법 리스크 거리두기 행보

### 비명계, 대표 입장 발표 압박

### 민주 계파 갈등 재점화 조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인사들의 줄 구속에 따른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 파장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물밑에 잠복해 있었던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민생을 고리로 사법리스크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당내 비명(비 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22일 당 대표 회의실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보증금 이자 부담이 치솟고 월세도 빠르게 올라 민생 핵심 하나인 주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대해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재벌 초부자에는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추진

진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며 삭감된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측근 구속 등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가리는 한편, 제1야당 대표로서 '민생예산 수호' 메시지를 던지며, 막바지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당내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도 이 대표 엄호에 총력을 가하는 한편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 무마전에도 열을 올렸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이 이러저러한(집단지적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대부분의 의원은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하는데 공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서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겠지만 본인 이 자진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라고도 했다. 검찰 기소까지 이뤄진 만큼 이 대표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김 부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헌 80조에 따라 김 부원장의 당직을 정지해야 한다는 비이재명계의 요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읽혔다.

하지만, 비명계는 더 날을 세웠다. 이 대표가 측근들의 구속과 사법리스크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호남지역 재선 의원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민심을 보고 정면돌파하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며 "이 대표가 최근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추후 행보에 나서서 것이 옳은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경쟁했던 박용진 의원은 "당의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 바로 당헌 80조"라며 김 부원장의 당직 정지를 제차 요구했다.

당 내외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비리 수사 결과, 이 대표의 관련성이 구체화된다면 당내 계파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당내 친문(친문재인), 친이(친이낙연)계가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와 정면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총선 공천권 등을 둘러싸고 사실상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친이계 일부 의원들은 야낙연 전 대표가 머무는 미국 워싱턴에 함께 가려 했다가 당의 위기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국회 예결특위 소위 원전수출 지원예산 공방

### 여야 신경전 끝 심의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2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원자력발전 수출 지원 관련 예산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측이 논쟁을 벌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는 산업부가 편성한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77억4500만원)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을 비롯한 전력 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명목의 이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86.8% 늘어나 증액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상임위 차원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수주가 들어온다는 것은 소위 '물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라며 "우리가 주춤

하는 사이 해외 원전 산업 생태계를 프랑스 등 다른 유럽이 장악하고 있다"며 정부 편을 들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운영덕 의원은 "많이 지원 해주면 예산을 초과한 만큼 성과가 날 것처럼 얘기하는 데 실제 그러기가 쉽지 않다"며 "당장 2배로 늘리는 건 좀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시 국민의힘 이용희 의원이 "홍보·수주·사후 관리 비용 이런 것에 몇십억 원이 아까울 일이나. 몇천억 원이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탈원전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앞으로의 먹거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원전식 예결위원장은 "전 세계 시장은 재생 에너지가 440조원, 원전이 53조원으로 8배 차이"라며 "원전 홍보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홍보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반론을 폈다. /연합뉴스

#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금투세' 결론 보류

### 민주 '절충안'에 정부 '수용 불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공방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됐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금투세 관련 심의에 착수했지만, 여야와 정부가 각자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 2년 유예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폐를 조건으로 내놨다. 이날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논의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길 조세소위위원장은 오후 4시께 심사 보류를 선언했다.

류 위원장은 이후 정회 중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시라'고 요구를 했다"며 "정부에서 또 관련된 자료를 좀 더 준비해서 논의를 계속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이날 금투세 논의를 보류한 이후 법안제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개시했다.

이 역시 법안제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이 '대기업 감세'라며 반대하는 사항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김승남, 농협 주유소 전기차 충전소 설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22일 전국에 있는 769개 농협 주유소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합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친환경차는 전기차 29만8633대, 수소차 2만4119대, 하이브리드차 104만1737대 등 총 136만4489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521만5692대의 5.4%에 달한다.

이에 민간 정유사들은 기존 주유소를 휘발유와 경유, LPG는 물론, 전기와 수소 등을 충전할 수 있는 복합에너지스테이션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올해 9월 기준 전국 전기차 충전시설은 12만7818개소, 수소차 충전시설은 118개소에 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농협합동조합법'에 농협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국에 있는 농협 주유소

769개소 중 전기차 또는 수소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농협 주유소는 단 1개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농협 경제지주와 지역농협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나목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 시설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전국에서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전남 여건을 감안, 130개 농협 주유소에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면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 간담회에 참석, 공공임대 확대를 요구하는 종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與, 국조 특위 명단 제출 진정성 보여야"

### "24일 계획서 채택 등 전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반드시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요청한) 특위 명단을 (시한인)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

원장과 간사 선출, 조사 계획서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것이 전제된다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직후 국조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사전 준비과정을 먼저 거친 후 진행할 수 있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선(先) 예산, 후(後) 국조' 역제안이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내 의견 조율을 거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 제출 등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의총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특위 명단을 오늘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야3당 의원 11명들로 개문발차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 차원의 보고가 있었고, 노용래 의원이 본인의 수사상황에 대한 신상 발언이 있었다"며 "(노 의원은) 광장히 역할을 호소했다. 반드시 결백을 밝혀달라고 다짐하셨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토지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 합 계 -	
<b>939.8㎡ 구 (284.3평)</b>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품질 LED플라카 최고화질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 아시아문화전당 앞 총출로 인구 공인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3. 높은 광고효과  
-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적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5. LED전광판의 특징  
-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